

【特集】

鳥取大学地域学部設置記念

鳥取県 中華人民共和国吉林省・大韓民国江原道交流10周年記念

北東アジア地域学国際会議

期日：2004年7月27日 7月28日

会場：鳥取大学地域学部

東北亞開發銀行 (NEADB) 設立 展望과 課題

具正謨、李鉉勳 (韓國、江原大學經濟貿易學部)

序論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을 금융,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동년 12월에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을 위해서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DB) 설립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왜 필요하며 설립 제안의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현존하고 있는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경위, 목적, 활동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기존방안들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동북아개발은행의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하고자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과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르면 금융허브의 단계별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단계 (2004-2007)는 특화 금융허브 기반 구축단계, 2단계 (2008-2012)에서는 특화 금융허브 완성단계, 3단계 (2013-2020)에서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또한 향후 2020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역할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낙후지역의 인프라 조성 및 경제개발 나아가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개발은행은 개발금융 기능의 수행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의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경제공동체 또는 지역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동북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특히 남북경협 확대 또는 경제통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국과 일본 및 미국 등이 북한의 경제개발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조성을 담당할 수 있다.

동북아개발의 금융수요 추정

가. 개발 소요자금 규모

동북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별, 지역별로 추정해 볼 경우 향후 10년간 동북아 지역의 SOC 개발수요는 약 1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1조 1,710억 달러, 한국 1,546억 달러, 북한 152억 달러, 기타 극동러시아 등 519억 달러 등이며 전통적인 자본수출국인 일본은 개별추정을 생략하였다.

나. 개발금융 수요 추정

중국의 개발금융 수요 추정을 위해, 각 투자주체의 최근 5년간 SOC 투자 점유비율을 추산해 보면 외국인투자자 필요액의 합계는 10년간 약 7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민자추진 후보사업에서 민자 예상규모는 46.7조원에 달하며, 그 중 타인자본 조달에 따른 금융주선 규모는 약 33.1조원(약 279억 달러)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개발금융 수요로 본다. 단, 동북아 물류중심추진과 관련된 투자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이 금액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열악한 자금상황 등을 고려, 총소요자금 152억 달러 전액을 개발금융 수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타 극동러시아, 몽골 및 다국적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개발금융 수요자금을 272억 달러로 추산하면, 향후 10년간 총 개발소요자금은 약 1조 3,927억 달러 중 개발금융 수요는 소요자금의 약 10%인 1,4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형태

가. ADB와의 차별화

동북아개발은행이 앞서 살펴본 MDBs의 하나로 정의된다면, 지역적으로 중복 영역을 가지는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설립형태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ADB는 표면적으로는 역내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주주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ADB의 주된 관심지역은 동북아시아보다는 남아시아 지역이며, 주요 운용목표나 부문에 있어서도 ADB는 최근 빈곤퇴치, 환경투자 등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 상당한 포커스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빈곤퇴치나 환경투자 보다도 역내 SOC와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개발이 우선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에서 ADB와 동북아개발은행이 경쟁관계나 상호배척 관계보다는 협조와 보완의 관계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북아개발은행은 주로 동북아시아의 역내 SOC나 에너지의 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 및 에너지 협력관계를 높여가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협력 관계를 키워가는데 사실상의 목표를 가져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ADB와 차별화되고, 상호보완적인 조직으로 설립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나. 출자규모와 참가국

본 연구에서 추정한 동북아시아의 개발금융 수요는 연평균 1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재 ADB가 약 30억 달러의 납입자본으로 연평균 50억 달러 내외의 투융자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0억 달러 이상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필요 납입자본금은 대체로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설립초기부터 충분한 규모의 출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권자본금을 60억 달러로 하고, 납입자본금은 우선 ADB 수준인 30억 달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가국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중추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역외의 국가 또는 국제금융기구 등에 initiative가 주어질 경우 운영이 왜곡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OECD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동북아 각국의 개발은행이나 선도은행 등과 각종 연기금, 보험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정될 수 있다. 이들은 개발금융 또는 민자 SOC에 대한 프로젝트 화이낸싱의 주선 및 참여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출자 및 협조용자 역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가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참가국을 상정하면 먼저 한일중 3개국을 중추로 하여 러시아, 몽골, 북한 등 동북아 6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홍콩 등을 포함하여 약 4개국, 그리고 미국, EU를 포함, 선진국 약 10개국 및 각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등이 참가국이 될 수 있다.

이 중 중추적 참가국은 동북아시아내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이다. 이들이 initiative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국 및 해당국가의 개발금융기관 등의 투표권 합계가 50%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업무내용과 은행의 위치

동북아개발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지역적인 범위 등의 차이를 제외하면 ADB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동북아시아의 균형발전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공공 및 민간자본의 역내투자를 촉진하고, 역내 개도국들의 단일 국적 또는 다국적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역내무역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하여 역내국가들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조정 지원을 행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UN 및 산하기관,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 가맹국, NGO 및 기타 민간투자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은행의 위치는 그 운영에 있어서 한일중 3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에서 본점의 소재지는 한일중 3국의 어느 한곳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3국은 각각 국제금융 또는 지역금융의 중심지로 역할을 부각코자 하기 때문에 각기 자국의 전략적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본점을 자국내 두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일단 지리적으로 한일중 3국의 금융중심의 한 가운데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개발의 첫 단추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도 동북아개발은행의 소재지의 하나로 적합할 수 있다.